

재외동포와 하나됨을 말하는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일제 식민시기 형성된 120만 재일조선인, 200만 재중동포, 그리고 남북분단과 냉전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땅을 떠나 미국, 유럽, 캐나다, 남미 등지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있다. 재외동포들의 인권과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대여섯평이나 뒹직한 작은 사무실에서 지구촌 곳곳의 소외받는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지난 99년 발표된 재외동포법에는 정부수립일(48년 8월 15일) 이전에 이주한 동포는 중국 및 러시아와

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 내용의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법 조항이란 판단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무부에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KIN의 손동주 사무국장은 금년 12월 말까지 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일이나 국회,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을 찾는 일로 무척 분주하다. KIN은 현재 동북아평화연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과 연대하여 4년 전부터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달 23일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도 외국국적 동포로 법적 인정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법무부의 발표대로 재외동포를 인정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지만 신문 활자의 제목은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율이 50%가 넘는 조선족이나 러시아, 다시 말해 가난한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재외동포 체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연간투자 규모 50만 달러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가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묻고 싶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조차 부정되어 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모국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않은가.

- 「재일조선인의 가슴속 - 신숙옥」 중에서

위 글은 현재 재일조선인으로 시사평론가이며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숙옥 씨의 자서전 「재일조



해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선인의 가슴속’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다.

재일조선인 3세로 일본 사회에서 살아 온 그의 삶에는 국적도 민족도 사라져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국민으로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조국 땅에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한국 국적의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의미의 성찰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 재일동포의 교육 현실

“현재 일본에는 90여 개의 민족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족학교’라 하면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계라고 인식되었지만 일본에서 우리 말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래에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져 학습내용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또 한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과 저희 실무자들이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6~70년대 보던 다 낡은 책 몇 권뿐이라 좀 놀랐습니다. 한국어 책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요즘은 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후원 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매년 재일조선인 청년들과의 만남은 KIN의 가장 큰 사업중 하나다.

손동주 사무국장은 열악한 재정과 교육환경으로 인해 민족학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 하면서 이같은 지원을 늘여가는데 애쓰고 있다. 다행히 민족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이전보다 쉬워져서 후원활동이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는다.

일본에서 민족학교는 정식학교로 허가가 나 있지 않거나 학교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니 그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 무국적자 '조선적'

과정이야 어찌됐든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도 둘로 갈라졌다. 그러던 중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면서 한국만이 일본과 수교를 하여 이 당시 조약에 따른 절차를 밟은 사람은 '한국적'을 취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조선적'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조국이 통일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사람,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한국적이든 '조선'이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긴 사람, 하루하루의 생활에 쫓겨 살면서 국적 같은 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생계를 지탱해야 했던 사람,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등 여러 입장을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무국적자 신세인 '조선적' 동포들에 대한 한국, 일본의 생각, 나아가 북한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6·15선언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관계 교류,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져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조선적'에 대한 인식은 공안 시각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선적들이 한국에 들어 오려면 한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게 어디 현재의 법적인 문제 해결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만든 또 하나의 우리 모습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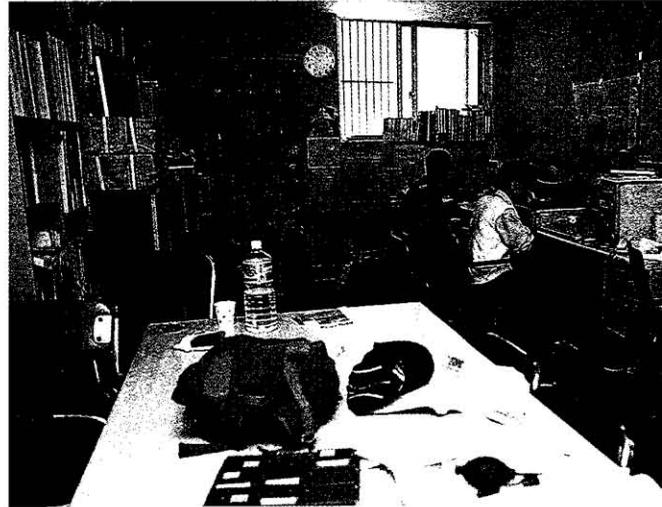
손동주 사무국장은 이렇듯 일본 속에 있는 그들 모두가 '재일조선인'으로 불려야 하며 우리의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 보아야만 '조선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해외동포 청년들의 한국체험

KIN은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서울시와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재일조선인 청년 서울 방문 및 청년결연사업>(11월 21~24일, 3박4일)을 벌이고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현재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유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으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나눔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재일조선인 청년들과 한국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역사관과 문화교류 체험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 2세들을 위한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KEEP)도 진행하고 있다.

KEEP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동포 청년들과 함께 내용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현지의 청년들이 한국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싶거나 한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그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한국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작은 시민단체가 그러하듯 KIN도 자원활동가, 후원회원들의 지원이 큰 자산이다.

이를 위해 거리의 노숙자를 만나기도 하고,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기도 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을 만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만남을 갖기도 한다.

KIN이 말하는 재외동포의 개념은 정부가 정해 놓은 재외동포법의 범주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 조선 민족 혈통이나 국적을 지니고 외국에서 살거나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후손'을 재외동포라고 일컫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적' 동포는 물론, 무국적자인 '조선적' 동포와 배신자라는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적'을 취득한 동포들까지를 포함한다.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이유로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나뉘어 사는 곳은 '일본' 뿐이다.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버려졌다'는 생각만이라도 넘어서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KIN을 만나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다.

<사진 도움 : KIN>

<편집부>